World Economy Today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6년 2월 24일 Vol. 26, No. 5

ISSN 1976-0515

첨단기술품목의 글로벌 산업정책 현황

이규엽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조문희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mhcho@kiep.go.kr, Tel: 044-414-1200)
김현수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장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정민철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Tel: 044-414-1052)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배경
2.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3. 보조금과 수입(제한) 정책: 첨단기술품목을 중심으로
4.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첨단기술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단기 대응과 중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신산업정책관측(NIPO: New Industrial Policies Observatory)은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산업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관된 체계를 통해 분류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월별(2009~26. 1.) 자료임.
- NIPO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무역 자료와 첨단기술품목(advanced technology product)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을 심화함.

▶ 글로벌 산업정책의 확산과 정책 조합(policy mix)의 변화를 식별함.

- [정책 집중도 심화] 2010년 이후 글로벌 산업정책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강도와 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임.
- [국가별 차별화 전략] 중국과 인도가 정책 시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은 보조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조금과 규제 정책을 병행하며, EU 등 선진국은 수입 규제 중심의 선별적 정책을 추진함.
- [수단별 동향] 보조금이 여전히 주된 수단이나, 최근 2022~25년 기간 수입(제한) 정책이 이전 시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자국산업 보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임.

▶ 정보통신 및 전자 분야의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보조금과 수입(제한) 정책의 순위가 높음.

- [보조금정책]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에 속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보조금정책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전체 산업정책 시행 건수를 고려할 때), 수출액 비중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보임.
- [수입정책]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에 속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은 선진경제국보다 해당 정책 시행 수위가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선진경제국이 첨단 산업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level playing field)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수입정책과 보조금정책은 국제 생산과 무역의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주요국의 산업정책 기조 변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가져올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우리 중장기 통상정책 설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심화하고 정책 당국의 정교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정책의 확산이 우리 무역·투자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해 나가야 함.

1. 배경

■ 미중 갈등,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공급망의 취약성, 첨단기술 산업의 시장 실패, 미국의 산업정책에 관한 공개적인 채택 등에 따라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음.

- 산업정책은 국내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산업에 자원을 유도하거나 집중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뜻함.
- 산업정책에 대한 실증적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임(Juhasz *et al.* 2025).[1)]
  - ○ [기존 연구의 한계] 산업정책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동일한 정책 수단(예: 관세)이 산업정책과 다른 정책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산업정책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반대 논리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산업정책과 수출경쟁력, 혁신 촉진성, 소득 수준에 따른 효과, 통상협정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량·미시 기반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임.

■ [연구 목적] 국별 산업정책을 일관된 분류 체계를 사용해 디지털 데이터로 체계화한 자료를 분석하여 통상정책 당국과 산업정책 관련 부처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전 세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하므로, 본고에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수치적 결과는 통상정책 당국과 산업정책 관련 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 예컨대 산업정책 추진은 재경부, 산업부, 무역위, 중기부, 과기부 등 부처와 관련성이 높음.
- 중장기 통상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요 선진경제국이 시행한 산업정책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은 우리 정책 당국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연구 방법] 신산업정책관측(NIPO: New Industrial Policies Observatory)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국별, 수단별 현황을 분석하고, 무역 자료와 첨단기술품목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을 심화함.

- NIPO 2.0은 2009~26. 1. 31. 기간 전 세계 경제국 70개 이상에서 발생하는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책을 Global Trade Alert 정책 수단(60개 이상으로 세분화)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산업정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임.
- 분석을 심화하기 위해 미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제공하는 첨단기술품목(ATP: Advanced Technology Product) HS 10-digit 정보를 활용함.
  - ○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는 HS22 6-digit 정보(NIPO data에 포함)를 ATP HS22 6-digit에서 결합함.
- HS22 6-digit 수준에서 첨단기술품목의 수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HS22 기준 수출 정보를 제공하는 CEPII BACI를 활용함(2022~24).
  - ○ 2022년 이전의 ATP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HS12, HS17 기준에 따른 코드 변경 이슈가 발생하므로, 본고에서는 2022년 이후 가용한 첨단기술품목 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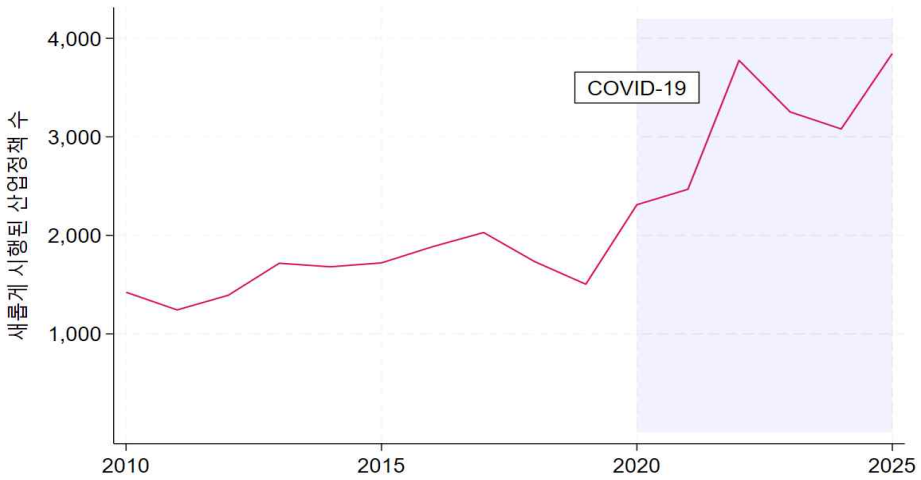
1) Juhasz, R., N.J. Lane, E. Oehlsen, and V.C. Perez(2025), "Measuring Industrial Policy: A Text-Based Approac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33895.

2.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 2010~25년 기간에 산업정책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산업정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그림 1.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 글로벌



자료: NIPO 2.0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를 기준으로 중국과 인도뿐 아니라 미국 포함 선진경제국이 상위권에 속함.

- 2010~25년 기간 중국이 산업정책 수단을 5,091건 시행하는 동안 미국은 4,674건 시행했으며, 중국과 달리 미국은 특히 2022~25년 기간 1,573건을 시행하면서 정책 강도를 높이는 추세임.
- 2010~25년 기간 한국이 시행한 산업정책 수단은 총 235건으로, 세계 41번째임(전체 자료 부록 2 참고).
  - ○ 한국은 2018~21년(28건)보다 2022~25년(151건)에 정책 대응을 강화하였음.

표 1.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 변화: 국별

No	국가	2010~25	2010~17	2018~25	2018~21	2022~25
1	중국	5,091	1,840	3,251	1,889	1,362
2	미국	4,674	1,994	2,680	1,107	1,573
3	독일	1,493	627	866	319	547
4	인도	1,293	513	780	329	451
5	캐나다	1,128	397	731	356	375
6	이탈리아	1,117	422	695	232	463
7	브라질	1,116	383	733	237	496
8	프랑스	1,042	357	685	258	427
9	스페인	837	291	546	187	359
10	영국	801	291	510	164	346
41	한국	235	56	179	28	151

자료: NIPO 2.0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세계적으로 보조금정책이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최근 수입(제한) 정책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도 다수 활용됨.

- 2010~25년 기간 시행된 산업정책 수단 중에서 보조금(subsidy)이 14,081건으로 가장 많음.
  - ○ 보조금 정책은 대부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뜻함(부록 1 참고).
- 같은 기간 수입(제한) 정책(import policy)은 6,813건으로 2위를 기록함.
  - ○ 2022~25년 기간(2,402건)에 시행 건수가 2018~21년(1,13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함.
- 수출(통제)(export policy), 무역구제(trade defence), 국산화(localisation) 역시 많이 사용됨.
- 2018년 이전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기타 정책이 급증한 점도 특기할 만함.
  - ○ 기타 정책에는 TBT,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시장 진입 규제, 외환/자본 통제 등이 해당함(부록 1 참고).

표 2.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 변화: 수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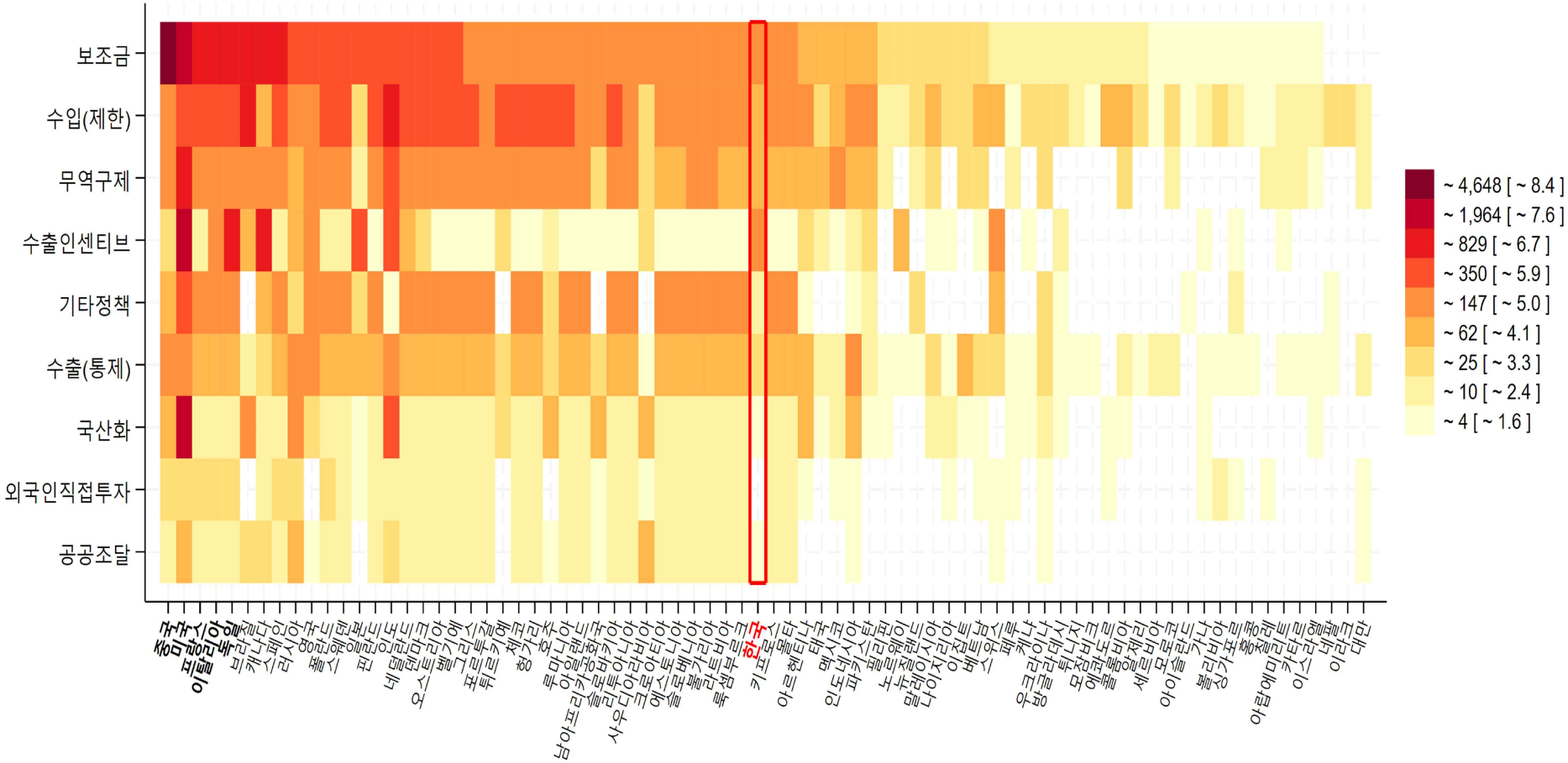
No	구분	2010~25	2010~17	2018~25	2018~21	2022~25
1	보조금	14,081	5,008	9,073	4,471	4,602
2	수입(제한)	6,813	3,272	3,541	1,139	2,402
3	무역구제	3,900	2,283	1,617	761	856
4	수출 인센티브	2,789	1,683	1,106	576	530
5	기타 정책	2,734	33	2,701	15	2,686
6	수출(통제)	2,053	205	1,848	359	1,489
7	국산화	1,992	514	1,478	651	827
8	외국인직접투자	355	42	313	16	297
9	공공조달	341	47	294	28	266

자료: NIPO 2.0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은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은 보조금뿐 아니라 국산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병행하며, EU와 선진경제 국가는 수입 규제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해 옴.

- 주요국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살펴보기 위해 히트맵(그림 2)을 분석함.
- 중국은 2010~25년 기간에 5천 건 이상의 산업정책 수단을 시행했는데(표 1), 그 가운데 보조금이 4,648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함(그림 2).
- 미국은 같은 기간 보조금뿐 아니라 국산화, 수출 인센티브, 무역구제 등도 활발하게 사용함.
- EU 주요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은 공통적으로 보조금, 수입(제한), 무역구제를 활발하게 사용함(다만 독일의 경우 수출 인센티브의 활용도 보조금 못지않게 높은 것이 특징임).
- 한국은 상대적으로 산업정책 시행 수위가 낮은 편이며(표 1), 정책 수단 중에는 보조금과 수출 인센티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공공 조달, 국산화 관련 정책은 미미한 수준임(그림 2).

그림 2.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누적): 국가·수단별



주: 1) X축은 정책을 시행한 국가이고, 좌측부터 보조금정책 건수가 많은 국가이며, Y축은 정책 수단으로 2010~25년 사이 빈번하게 관측된 정책 수단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2) 히트맵은 해당 누적 건수의 로그값을 기준으로(데이터 분포의 불균형과 왜도를 고려) 9개 구간으로 균등분할하여 표시함. 범례의 수치는 각 구간의 최댓값이며, [ ]는 로그값[=ln(1+건수)]임.
자료: NIPO 2.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보조금과 수입(제한) 정책: 첨단기술품목을 중심으로

가. 보조금정책

■ 세계 첨단기술 수출을 주도하는 정보통신 및 전자 산업은 규모 면에서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개입되는 핵심 전략 영역임이 확인됨.

- 첨단기술품목(ATP) 중 정보통신 분야의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약 46.2억 달러에 달하며, 전자 분야 또한 약 40억 달러를 기록하여 타 품목군 대비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큼.
-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분야는 첨단기술품목군 중 보조금정책의 영향력이 양적으로 가장 집중되는 영역으로, 2022~25년 기간 세계 77개국에서 총 12만 5,325건의 정책 사례가 식별됨(HS22 6-digit 기준).
- 전자(electronics) 분야는 관련 보조금정책 중 첨단기술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중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품목군 대비 높은 정책 집중도를 보임.

표 3.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정책 현황: 품목군별

첨단기술품목 대분류	세계 수출시장 (10억 달러)	Non_IP (A건)	IP (B건)	B/A (%)	IP_ex_only (건)	IP_im_only (건)
생명공학 (Biotechnology)	1.05	88,609	20,393	23	13,462	6,216
생명과학 (Life Science)	2.31	421,509	94,703	22	61,176	27,306
광전자 (Opto-Electronics)	0.73	206,496	62,810	30	38,167	17,588
정보통신 (Information & Comm)	4.62	582,017	125,325	22	80,323	39,863
전자 (Electronics)	4.00	161,854	108,491	67	59,896	30,585
유연생산 (Flexible Manufacturing)	0.86	257,483	98,363	38	63,364	24,028
첨단소재 (Advanced Materials)	0.10	34,258	5,064	15	3,243	1,605
항공우주 (Aerospace)	1.27	100,388	23,052	23	13,469	7,275
무기 (Weapons)	0.06	44,403	3,634	8	1,860	1,034

주: 1) 세계 수출시장은 2022~24년 HS22 6-digit 기준 ATP에 속한 품목의 세계수출액의 총합을 뜻함.
2) Non-IP, IP, IP_ex_only, IP_im_only는 ATP 품목을 교역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함.
3) Non-IP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출입국 정책 건수의 합계, IP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국 정책 건수의 합계, IP_ex_only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수출국의 시행 건수, IP_im_only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수입국의 시행 건수임.
자료: NIPO 2.0, CEPII BACI, Census Bureau ATP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의 정보통신 및 전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정책을 살펴보면, 수출 비중 대비 정책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정보통신 분야 보조금 정책 시행은 중국(20,311건)과 미국(14,050건)이 주도하며, 한국은 4,616건을 기록함.
- 전자 분야 역시 중국(9,696건)과 미국(7,927건)이 주도하며 한국은 3,292건 기록함.
  ○ 한국(3,292건)은 일본(3,434건)보다 적으나,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임.

표 4. 보조금 정책 건수와 수출액: 정보통신 및 전자 분야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			전자(Electronics)		
국가	정책 건수	수출액(10억 달러)	국가	정책 건수	수출액(10억 달러)
중국	20,311	1.68	중국	9,696	0.75
미국	14,050	0.20	미국	7,927	0.22
독일	7,287	0.07	독일	5,801	0.21
캐나다	4,924	0.01	프랑스	4,211	0.04
튀르키예	4,711	0.00	이탈리아	3,982	0.02
인도	4,697	0.02	네덜란드	3,761	0.02
한국	4,616	0.11	영국	3,512	0.03
네덜란드	3,675	0.03	일본	3,434	0.14
영국	3,669	0.02	한국	3,292	0.35
이탈리아	3,209	0.01	인도	3,202	0.00

자료: NIPO 2.0, CEPII BACI, Census Bureau ATP 등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수입(제한) 정책

■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보조금정책보다 수입(제한) 정책이 더 많이 식별됨.

- 정보통신 분야는 첨단기술품목군 중 보조금 정책뿐 아니라 수입(제한) 정책의 영향력이 더 큰 영역으로, 2022~25년 기간 세계 77개국에서 총 31만 5,623의 정책 사례가 식별됨(HS22 6-digit 기준).
-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는 관련 수입(제한) 정책 중 첨단기술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중이 각각 81%,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품목군 대비 높은 정책 집중도를 보임.

표 5.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 정책 현황: 품목군별

첨단기술품목 대분류	세계 수출시장 (10억 달러)	Non_IP (A건)	IP (B건)	B/A (%)	IP_ex_only (건)	IP_im_only (건)
생명공학 (Biotechnology)	1.05	71,367	37,635	53	17,612	7,106
생명과학 (Life Science)	2.31	353,557	162,655	46	81,410	39,978
광전자 (Opto-Electronics)	0.73	169,599	99,707	59	49,288	27,120

첨단기술품목 대분류	세계 수출시장 (10억 달러)	Non_IP (A건)	IP (B건)	B/A (%)	IP_ex_only (건)	IP_im_only (건)
정보통신 (Information & Comm)	4.62	391,719	315,623	81	158,527	87,227
전자 (Electronics)	4.00	158,468	111,877	71	53,889	31,378
유연생산 (Flexible Manufacturing)	0.86	221,779	134,067	60	64,109	34,047
첨단소재 (Advanced Materials)	0.10	24,903	14,419	58	7,226	3,652
항공우주 (Aerospace)	1.27	80,678	42,762	53	19,417	12,183
무기 (Weapons)	0.06	36,104	11,933	33	5,262	3,077

주: 1) 세계 수출시장은 2022~24년 HS22 6-digit 기준 ATP에 속한 품목의 세계수출액의 총합을 뜻함.
2) Non-IP, IP, IP_ex_only, IP_im_only는 ATP 품목을 교역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함.
3) Non-IP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출입국 정책 건수의 합계, IP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국 정책 건수의 합계, IP_ex_only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수출국의 시행 건수, IP_im_only는 ATP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 수입국의 시행 건수임.
자료: NIPO 2.0, CEPII BACI, Census Bureau ATP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정보통신 및 전자 분야에 속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정책 시행 건수는 선진경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정보통신 분야 수입(제한) 정책 시행은 독일(12,363건)과 프랑스(11,971건)가 주도하며 한국은 2,808건을 기록함(39위).
- 전자 분야에서도 독일(4,937건)과 영국(4,683건)이 주도하며 한국 1,210건 기록함(34위).
-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에서 첨단기술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3,454건, 1,349건보다도 낮은 수준임.

표 6. 수입(제한) 정책 건수와 수출액: 정보통신과 전자 분야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			전자(Electronics)		
순위	국가	정책 건수	수출액(달러)	국가	정책 건수	수출액(달러)
1	독일	12,363	93,300,235	독일	4,937	132,048,557
2	프랑스	11,971	21,311,748	영국	4,683	20,370,048
3	네덜란드	11,643	93,736,293	네덜란드	4,311	21,115,391
4	영국	10,295	28,299,431	프랑스	4,145	29,990,621
5	이탈리아	10,085	18,240,624	이탈리아	3,861	12,477,105
6	스페인	9,633	8,524,322	튀르키예	3,404	4,092,715
7	덴마크	9,537	5,712,619	폴란드	3,369	5,238,067
8	벨기에	9,148	9,315,851	벨기에	3,354	16,787,160
9	폴란드	8,547	30,819,572	스페인	3,337	13,030,521
10	스웨덴	8,422	15,240,928	오스트리아	2,978	8,794,770
11	튀르키예	8,392	3,113,596	중국	2,932	236,580,960
12	체코	8,185	55,815,212	체코	2,876	11,606,625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			전자(Electronics)		
13	오스트리아	7,970	7,782,098	스웨덴	2,867	8,780,236
14	헝가리	6,595	28,334,715	덴마크	2,713	1,589,961
15	핀란드	6,470	4,106,216	헝가리	2,478	10,757,866
16	아일랜드	6,318	22,124,660	핀란드	2,380	2,507,422
17	태국	5,943	80,784,953	태국	2,338	29,135,021
18	포르투갈	5,742	3,639,183	말레이시아	2,230	91,494,992
19	리투아니아	5,572	2,492,910	스위스	2,161	3,685,678
20	중국	5,537	612,400,091	루마니아	2,143	7,722,807
21	말레이시아	5,403	54,683,262	슬로바키아	2,096	8,356,870
22	루마니아	5,238	6,206,768	포르투갈	1,847	2,587,248
23	미국	5,103	87,152,839	슬로베니아	1,846	1,884,855
24	스위스	5,076	4,204,617	아일랜드	1,811	29,894,013
25	슬로바키아	4,888	10,109,725	미국	1,771	52,410,218
26	그리스	4,762	2,129,557	불가리아	1,757	1,815,033
27	불가리아	4,646	1,331,827	리투아니아	1,715	879,136
28	슬로베니아	4,608	1,414,704	브라질	1,475	861,757
29	브라질	4,538	1,479,832	에스토니아	1,436	650,814
30	라트비아	4,417	2,230,274	일본	1,349	36,677,372
31	인도	4,131	19,627,087	룩셈부르크	1,325	368,619
32	에스토니아	4,005	3,365,105	인도네시아	1,235	1,990,659
33	캐나다	3,734	5,750,977	그리스	1,228	186,941
34	룩셈부르크	3,629	420,835	한국	1,210	64,059,654
35	일본	3,454	29,411,393	라트비아	1,165	523,552
36	인도네시아	3,415	11,964,507			
37	호주	3,367	1,276,655			
38	크로아티아	3,245	721,632			
39	한국	2,808	33,479,970			
40	홍콩	2,648	13,440,703			

자료: NIPO 2.0, CEPII BACI, Census Bureau ATP 등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정책 시사점

■ 중국과 미국, EU와 선진경제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산업정책 시행 수위는 낮은 편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통상 마찰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그만큼 더 넓게 남아 있음을 시사함.

-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 등 국경 조치(at the border measure)와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지역화, 공공 조달 등 국경 내 조치(behind the border measure)를 모두 활용하는 점은 공통됨.

  ○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산업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공조달·인증표준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흐름

- 중국과 미국, EU와 선진경제국 등이 앞다투어 첨단 산업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level playing field)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품목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집중 배분과 정책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최적화할 시점이며, 첨단기술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산업 안보 패키지도 검토해야 함.

■ 수입정책과 보조금정책은 국제 생산과 무역의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수입(제한) 정책은 국경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유발하므로, 그에 따라 무역 감소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배치가 나타남.[2)]
  - ○ 관세는 보복·비용상승을 동반하므로, 한국은 (특히 수출주도·중간재 연계가 큰 구조상) 보조금/R&D/인프라/표준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만들고, 관세·수입규제는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편이 합리적임.
- 보조금 경쟁은 가격경쟁력뿐 아니라 입지경쟁(투자, 생산 위치)을 통해 무역 패턴의 변화를 유발함.
  - ○ 향후 무역은 비용과 품질 경쟁뿐 아니라 보조금과 지원 요건(국산 부품, 현지생산, 조달 요건 등)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국의 산업정책 기조 변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가져올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우리 중장기 통상정책 설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고도화된 정책 모니터링 데이터(예시: NIPO)를 활용하여 주요국과 경쟁국의 산업정책 수단별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산업정책의 변화 양상을 지속하여 추적·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분석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수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할 시점임.

■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심화하고 정책 당국의 정교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정책 확산이 우리 무역·투자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해 나가야 함.

- 공급망의 회복력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가진 국내외 기업을 자국 내로 유치(reshoring, friend-shoring)하는 정책이 중요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바,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 산업의 핵심 생산 시설을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이전시키는 산업정책의 실효적 성과와 공급망의 안정성 기여도를 분석해야 함.

---

2) 조문희, 배찬권, 이규엽, 강준구, 김지현(2020),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문희, 이규엽, 김현수, 강민지, 금혜윤, 정민철(2025),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발간 예정).

- 주요국의 산업정책 기조와 투자 정책 목표가 효율성 극대화보다는 회복력에 초점을 맞출 때,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비효율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
- 최근 급증한 투자 규제와 안보 심사 강화가 '기술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파편화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함.KIEP

부록 1. Global Trade Alert 분류법에 따른 산업정책과 수단

부표 1. 산업정책과 수단

산업정책	수단
수출(통제) 정책 (Export Policy)	수출 금지 (Export ban)
	수출 허가 요건 (Export licensing requirement)
	수출 기준가격 (Export price benchmark)
	수출 물량 할당 (Export quota)
	수출 관세 할당 (Export tariff quota)
	수출세 (Export tax)
	기타 수출 관련 비관세조치 (Export-related non-tariff measure, nes)
	내수시장 우선 공급 요건 (Local supply requirement for exports)*
수출 인센티브 (Export Incentive)	수출 보조금 (Export subsidy)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Financial assistance in foreign market)
	기타 수출 인센티브 (Other export incentive)
	수출 세제 혜택 (Tax-based export incentive)
	무역 금융 (Trade finance)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FDI Policy)	FDI: 진입 및 소유권 규제 (FDI: Entry and ownership rule)
	FDI: 재정적 지원 (FDI: Financial incentive)
	FDI: 기타 대우 및 운용 규제 (FDI: Treatment and operations, nes)
수입(제한) 정책 (Import Policy)	수입 금지 (Import ban)
	수입 허가 요건 (Import licensing requirement)
	수입 감시 제도 (Import monitoring)
	수입 기준가격 (Import price benchmark)
	수입 물량 할당 (Import quota)
	수입 관세 (Import tariff)
	수입 관세 할당 (Import tariff quota)
	기타 수입 관련 비관세조치 (Import-related non-tariff measure, nes)
	수입품 내국세 부과 (Internal taxation of imports)
	최저 수입 가격제 (Minimum import price)
	기타 수입 부과금 (Other import charges)
국산화 정책 (Localisation Policy)	국내산 부품 사용 인센티브 (Local content incentive)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국내인력 고용 인센티브 (Local labour incentive)
	국내인력 의무 고용 (Local labour requirement)
	국내 사업운영 인센티브 (Local operations incentive)
	국내 사업운영 요건 (Local operations requirement)

산업정책	수단
	국내 부가가치 창출 인센티브 (Local value added incentive)
	기타 국산화 조치 (Localisation, nes)
	공공조달 국산화 (Public procurement localisation)
	수출입 균형 조치 (Trade balancing measure)
기타 정책 (Other Policy)	개인 금융 거래 규제 (Control on personal transactions)
	기업 자본 거래 및 투자수단 규제 (Controls on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instruments)
	대외 차입 및 여신 규제 (Controls on credit operations)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제한 (Foreign customer limit)
	조치 수단 불분명 (Instrument unclear)
	지식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노동시장 접근성 규제 (Labour market access)
	이주인력 처우 (Post-migration treatment)
	외화 회수 및 매각 의무 (Repatriation & surrender requirements)
	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 결제 제한 조치 (Trade payment measure)
공공조달 정책 (Procurement Policy)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규제 (Public procurement access)
	공공조달 국내 우대 (Public procurement preference margin)
	기타 공공조달 규제 (Public procurement, nes)
보조금 (Subsidy)	자본 투입 및 지분 참여 (Capital injection and equity stakes (including bailouts))**
	무상 재정 지원 (Financial grant)
	수입 인센티브 (Import incentive)
	현물 지원 (In-kind grant)
	이자 보전 (Interest payment subsidy)
	대출 보증 (Loan guarantee)
	가격 안정화 조치 (Price stabilisation)
	생산 보조금 (Production subsidy)
	기타 정부 지원 (State aid, nes)
	유형 미상의 정부 지원 (State aid, unspecified)
	정부 대출 (State loan)
	조세 및 사회보험 감면 (Tax or social insurance relief)
무역구제 (Trade Defence)	우회수출 방지 (Anti-circumvention)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상계 관세 (Anti-subsidy)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미분류	경쟁적 통화 절하 (Competitive devaluation)
	지정 세관 통과 요건 (Port restriction)

주: * 원문은 '수출 관련 국내 공급 요건'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해당 조치의 내용은 'Domestic Market Obligation(DMO)'와 거의 동일함. ** 개정된 분류(2026년 2월 4일자)에서는 5가지(기업 통제, 지분 참여, 채권 매입, 금융투자 지원, 대출 지원)로 세분화됨.
자료: NIPO 2.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2.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 변화(전체)

부표 2. 산업정책이 시행된 건수 변화: 국별(전체)

No	국가	2010~25	2010~17	2018~25	2018~21	2022~25
1	중국	5,091	1,840	3,251	1,889	1,362
2	미국	4,674	1,994	2,680	1,107	1,573
3	독일	1,493	627	866	319	547
4	인도	1,293	513	780	329	451
5	캐나다	1,128	397	731	356	375
6	이탈리아	1,117	422	695	232	463
7	브라질	1,116	383	733	237	496
8	프랑스	1,042	357	685	258	427
9	스페인	837	291	546	187	359
10	영국	801	291	510	164	346
11	러시아	734	357	377	139	238
12	폴란드	675	239	436	118	318
13	네덜란드	637	213	424	127	297
14	스웨덴	592	217	375	100	275
15	벨기에	585	206	379	102	277
16	덴마크	584	205	379	100	279
17	핀란드	568	215	353	100	253
18	오스트리아	544	191	353	86	267
19	체코	525	184	341	74	267
20	그리스	525	186	339	80	259
21	일본	504	166	338	98	240
22	포르투갈	495	178	317	71	246
23	루마니아	492	169	323	68	255
24	헝가리	486	158	328	74	254
25	슬로바키아	471	165	306	68	238
26	아일랜드	470	155	315	76	239
27	불가리아	462	153	309	64	245
28	리투아니아	457	144	313	63	250
29	슬로베니아	453	154	299	59	240
30	에스토니아	437	141	296	56	240
31	호주	434	99	335	144	191
32	크로아티아	417	131	286	62	224
33	라트비아	416	133	283	50	233
34	룩셈부르크	396	137	259	48	211
35	키프로스	392	140	252	47	205
36	튀르키예	392	107	285	139	146
37	몰타	363	131	232	45	187
38	아르헨티나	325	148	177	109	68
39	인도네시아	281	149	132	57	75

No	국가	2010~25	2010~17	2018~25	2018~21	2022~25
40	남아프리카공화국	251	100	151	76	75
41	한국	235	56	179	28	151
42	사우디아라비아	219	101	118	23	95
43	파키스탄	209	91	118	60	58
44	스위스	203	107	96	5	91
45	멕시코	170	87	83	45	38
46	노르웨이	89	32	57	34	23
47	태국	87	29	58	26	32
48	베트남	82	42	40	19	21
49	말레이시아	81	34	47	29	18
50	우크라이나	78	41	37	10	27
51	이집트	77	42	35	23	12
52	콜롬비아	72	45	27	18	9
53	뉴질랜드	60	6	54	20	34
54	나이지리아	43	26	17	5	12
55	방글라데시	36	11	25	5	20
56	에콰도르	35	28	7	7	0
57	필리핀	34	5	29	16	13
58	모로코	32	10	22	14	8
59	케냐	27	12	15	3	12
60	볼리비아	24	17	7	2	5
61	아랍에미리트	20	6	14	5	9
62	네팔	20	5	15	8	7
63	알제리	19	10	9	5	4
64	대만	18	5	13	1	12
65	페루	16	7	9	3	6
66	가나	16	8	8	5	3
67	카타르	15	4	11	4	7
68	이라크	14	1	13	0	13
69	싱가포르	13	5	8	1	7
70	튀니지	13	7	6	2	4
71	이스라엘	11	7	4	4	0
72	세르비아	10	3	7	2	5
73	칠레	10	7	3	2	1
74	모잠비크	8	3	5	2	3
75	아이슬란드	7	5	2	1	1
76	홍콩	4	0	4	1	3

자료: NIPO 2.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